

# 당정 “교권침해 생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교권 보호·회복 방안 마련 협의회 교원지위·아동학대법 개정 나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8월내 마련 학부모 책임 강화 민원 체계 개선

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서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과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서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정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러 이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산단 LG화학 찾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왼쪽에서 세번째) 국무총리와 김영록(두번째) 전남지사가 26일 오후 여수산단 내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은 CA 2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 온라인 국민참여토론 근거로...집회·시위 제재 강화

### 대통령실,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행복추진,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화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법적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회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계사만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입장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임명

### 베트남 최영삼·칠레 김학재 등 윤 대통령 재외 공관장 5명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감촉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진 전 주러시아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

명됐다. 이 대사는 이날 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신임 주베트남 대사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주베트남 대사는 오영주 전 임 대사가 이도훈 대사 후임으로 지난달 말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쑩에이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주칠레 대사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홍영기 주 체코 대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

## 선관위, 이번주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 청구

###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거부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달 9일 특례제출 의혹에 한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에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의혹 관련 감사 방침을 통보한 지난 달 1일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수장에 올랐다. /연합뉴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2023-152호

# 2023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전기전자업종 패키지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의 전기전자업종 패키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1차	2차
참여기업 선정	사업 신청 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3.07.19. ~ '23.08.21	
	참여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www.itube.or.kr)	'23.07.19 ~08.09.	'23.08.21 ~09.08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3.8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대표기관 → 참여기업	'23.9월 중순	
	민간부담금 입금	참여기업 → 서비스운영기관 계좌	사업종료 전	
	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23.8월 말	'23.9월 중순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계약기간 내	
	완료 검사	서비스운영기관 ↔ 참여기업	검사 완료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www.itube.or.kr)	검사 완료 이후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공지 및 상세-변경 일정은 i-Tube 통해 확인  
\* 2차 공고는 1차 선정 및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미공고 가능

서비스 분야	패키지서비스명	지원내용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IoT 기반 스마트홈	IoT 기반 스마트홈 데이터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시스템 전기전자 소재-부품 시스템	-성능/환경/수명 시험평가 및 평가 -소재 부품 시스템 구조설계/성능예측 -인체공학형 제품 환경평가 -고정면적(표면 및 내부 구조 분석)	21백만원 이내	
차세대 이동통신용 (5G, 6G등) 융합 부품 및 제품	차세대 이동통신용 (5G, 6G등) 융합 부품 및 제품 서비스 지원	-융합부품 및 제품의 정보제공, 예비 시험 및 분석, 기술상담 및 기술지도, 개발 로드맵에 따른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개발(양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및 EMC 시험 지원	64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30%이상
디지털화를 위한 고품격 저전력화 DX인도체	DX 도약을 위한 정보처리, 전산, 통신, 이미지 반도체 기술지원	-반도체 관련 소재분석 (표면, 성분, 물성분석) -반도체 신뢰성시험평가 (환경, 수명, 정전기) -반도체 불일분해 -반도체 소재특성평가	88백만원 이내	
차세대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차세대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소재 및 핵심부품 패키지 서비스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AR/VR) 핵심부품 관련 제품의 설계/개발/양산/시험 등 각 개발 단계별 기술지원 -설계, 청정개선, 공정개발, 신뢰성 및 인증 등 지원	10백만원 이내	

\* 최소 정부지원금 : 4백만원 이상  
\* 정부지원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산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기전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험분석 연구센터	박 주 철 책임연구원	김 성 민 선임연구원	1533-0101 (전기전자 5)
					055) 791-3567
IoT 기반 스마트홈 데이터스 전기전자 소재-부품-시스템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항공국방 신뢰성센터	양 일 영 선임연구원	김 성 민 선임연구원	062) 605-9447
					043) 270-2334
차세대 이동통신용 (5G, 6G등) 융합 부품 및 제품	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센터	이 성 준 선임연구원	김 재 윤 선임연구원	054) 460-9057

■ 접수처  
• 접수기간 (1차) 2023년 7월 19일 ~ 2023년 8월 9일 (2차) 2023년 8월 21일 ~ 2023년 9월 8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itube.or.kr, 아이튜브)  
\* [붙임] 참여기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상담 및 문의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전기전자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 지원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지원방법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전기전자업종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선정일 ~ '23.12.31 이내
  - 선정 이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기간에 기준함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전기-전자업종)
- 지원체계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중심으로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 전기전자업종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험-분석 등 지원을 위해 아래 패키지서비스를 지원
- 해당 서비스 분야별 패키지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세부계약서 필요 서비스 선택)
-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의 사업비로 서비스 추진